

평화당 “연동형 비례제 반드시 관철”

국회서 천막 농성 돌입

민주평화당이 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당 상징 색인 연두색 비닐 천막을 설치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은 점퍼와 비옷 차림으로 자리했다.

정 대표는 천막 당사에서 연 최고위 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연동형 비례대

표제 관철을 위한 천막 당사 투쟁을 시작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한 단호한 정치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 본격적 싸움이 시작됐다”며 “정의롭지 못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거대양당의 기득권과 꼼수는 민심과 시대 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각당의 의지는 밝혀졌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야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연동형 비례제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면

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당제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야당, 시민사회와 공동 행동을 하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도입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천막을 치고 선

거제도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을 갖고 동참하라”고 역설했다.

평화당은 천막 당사 농성과 함께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1인파켓 시위, 서명운동에 나섰고, 전국을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강연회를 여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에 앞서 천막을 설치하려는 평화당 인사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국회 방화과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전북태권도협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완주군수배 및 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북도 태권도협회(회장 최동열)측은 송 부의장이 그동안 전라북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며, 특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등 태권도인에게 큰 힘이 된 점에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지용 부의장은 “매년 많은 분들의 봉사과 희생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완주군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야당 불참 속 예산안 제안 설명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산림관광 활성화와 입법지원 방안 모색

안호영 의원, 6일 토론회 개최

전북의 산림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오는 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실(실장 이용준)과 함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추진하는 토론회다. /김진성 기자

“공공일자리 확대에 경제활력 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81만개 창출도 차질없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 “내수활성화와 이력현상 방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용·성장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고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정을 통한 단기일자리 확대를 지지하는 취지의 질의에 “취약계층에 일경험을 제공하고 실업자의 이력현상 방지와 더불어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뉴시스

與 ‘조국 구하기’ 총력전

野 “사퇴” 요구에 與 ‘구원투수’ 잇단 등판 당내 일각선 익명 요구 “사퇴 필요” 언급도

최근 잇따른 청와대 비위에 아권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이 쏟아져 나오자 민주당은 3일 본격적인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다만 당내 이견은 미처 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청와대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과 특별감찰반의 수사개입, 골프장음 등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은 공식 사과에 내놓았어도 사퇴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3일 당내 조응천 의원의 ‘조 수석 사퇴’ 목소리가 나오자 주요 인사들의 ‘조국 구하기’ 발언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진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안민석·박광은 의원 등이 잇따라 ‘조국 사퇴 반대’ 주장 대열에 동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민석 의원은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며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했고 박광은 의

원은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똑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의 주장을 모아보면 조 수석은 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다. 조 수석이 물러나면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 때문에 그의 사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처럼 조국 수석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지금의 청와대는 독선적이다.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 당시 청와대를 향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조 수석은)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조국 구하기’에 나선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했고 박광은 의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 靑 내부는 썩어들어가”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해의순방 중에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남의 눈의 티는 적폐라고 하면서 내 눈의 들보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직원) 비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서 “그들이 흑시 탈당계를 내더라도 접수하지 말고, 기다렸다 허위였다면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M.S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